

금남로에서



장필수 논설실장

애민(愛民) 사상을 내세운 세종대왕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니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라는 백성에 의지하고 백성은 먹이를 것에 의지한다"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다.

정치인의 큰 덕목이자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예나 지금이나 주민들의 생계 안정이다. 지급처벌 최악의 불황에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가장 유력한 정치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브랜드 정책인 '먹사니즘'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그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집권 비전으로 '잘사니즘'을 새롭게 내세웠지만 이면에는 결국 '먹사니즘'이 있었다. 그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먹사니즘'의 경쟁적 확산

먹사니즘이 전남지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이 주민 1인당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영광군은 이번 설을 전후로 1차분 50만원을 지급했는데 전통시장이

우후죽순 민생지원금의 명암...해법은

활기를 띠 정도로 골목상권에 인기가 돌았다. 나머지 50만원은 추석때 지급할 예정인데 주민들은 소비 촉진을 넘어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나주·고흥·보성·해남·완도·진도·곡성·구례·무안 등 9개 시군도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이다.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1인당 지급액과 인구수에 따라 예산이 늘어나는데 5만2000여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영광군이 520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흥군(182억원), 보성군(112억원) 순이다.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목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 확보와 지속성 여부다. 나주시와 한빛원전에서 지역자원시설세로 300억원을 확보한 영광군은 그나마 나옴데 나머지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이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다수 시군이 비상금 형태인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이 지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난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1회성으로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민주당 공천을 목표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로 대표되는 '이재명표 정책'을 시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공천이 바로 당선인 지급까지의 지역 정치 풍토로 볼때 마냥 웃어넘길 일은 아닌듯 하다.

민생지원금 지급으로 다른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전남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 "같은 도민인데 왜 우리는 지원금을 주지 않느냐"는 항의에 뭐라 답할 것인가.

그렇다고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를 탓할 일

은 아니다. 관건은 민생지원금이 지속 가능하도록 방안을 찾는 데 있다. 무엇보다도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이 대안이 될 만하다. 신안군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인허가를 내주는 대신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에 수익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도입 4년만에 주민들에게 지급된 햇빛연금은 220억원으로 청년들이 돌아오면서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정부가 지역화폐로 지급하길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민생을 살리는 것이다. 신안군처럼 할 만한 지자체가 드문 현실에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 재정 지출이 예산 조기 집행에 그쳐선 안된다.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적기에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마침 정치권에서도 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다행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0조 추경 제안에 어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생 추경에 동의했다. 다만 지역화폐 방식의 추경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어차피 지역경제 살리기가 목표라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

민생지원금 지급 목표는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있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 입장에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자금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전남 10개 시군의 민생지원금 지원에서도 지역화폐의 골목 상권 활력 효과는 확인됐다. 이번 설 연휴 정부의 갑작스런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경기를 살리기보다 여유있는 사람들의 해외여행만 부추겼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은편칼럼

정월대보름 아침에



옥영석 (주)농협총상 대표이사

순간이다. 달의 움직임이 표준으로 삼는 음력을 사용하던 농경 사회에서는 설날이 새로운 해의 시작이니 당연히 큰 의미가 있었지만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의 비중이 설보다 작지 않았다. 농사력에 맞춰 해마다 관례처럼 행해지는 일들을 기록한 '동국세시기'에는 세시풍속의 절반이 정월에 몰려있고 대보름과 관련된 것이 4분의 1을 넘는다고 한다. 동글고 가득 찬 보름달을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생각했으니 새해를 맞아 보름에 이르는 동안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행사가 많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동제(洞祭), 달맞이 소원빌기, 지신밟기, 더위팔기, 쥐불놀이, 용알뜨기 등이다. 동제는 수호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농사가 잘 되도록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며 서로 화합하는 기회의 장이었다. 지신밟기는 팽과리, 북, 날라리, 장구 등을 두드리며 양반, 포수, 머슴, 각시 등으로 구성된 놀이패들이 마을 당산과 집집마다의 지신을 밟으면서 귀신을 물리치고 경사를 끌어들이는 마을행사이자 놀이였다. 놀이패가 집에 들어오면 주인은 고사상을 차리고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물론 마을경비로 사용할 곡식을 내놓는데 이때 성의가 부족하다 싶으면 포수가 겁을 주기도하고 각시야 양말을 부리며 더 보태게 해 구경꾼들을 즐겁게 하기도 한다.

쥐불놀이는 병해충예방을 위해 논두렁을 태우고 마을 앞 빈들에서 온 동네 아이들이 불꽃통을 돌리다 하늘에 던지면 불꽃놀이 못지않은 장관이었다. 용알뜨기는 정월대보름 전남 하늘의 용이 육지로 내려와 우물

에 알을 낳는다고 믿던 부녀자들이 대보름날 새벽닭이 울 때를 기다렸다가 알을 다투어 우물 물을 길어 오던 것이다. 용의 알을 가장 먼저 가져감으로써 집안에 복을 들이고 그 물로 밥을 해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믿었다.

정월대보름 먹음거리로는 약밥, 귀밝이술, 부럼, 오곡밥, 묵은 나물, 팥죽 등이 있다. 찹쌀에 참기름, 꿀, 간장, 대추, 밤, 잣 등을 넣고 찌서 익힌 약밥은 비싸고 좋은 재료가 들어갔다 하여 약식(藥食)이라 불렀지만 서민들은 잣, 대추, 밤 등을 구하기 어려워 오곡밥을 지어먹었다. 쌀, 조, 수수, 팥, 콩으로 지은 오곡밥은 대보름 즈음에 먹는다 해서 보름밥이라고도 했다. 나물 반찬으로는 호박고지, 무고지, 가지나물, 도라지, 고사리 등을 말리고 묵혀 두었다 먹었는데 묵은 나물 또는 묵나물이라고도 한다.

대보름날 이른 아침 데우지 않은 찜주 한 잔을 마시는 귀밝이술은 귀가 밝아지는 것은 물론 한 해 동안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해준다고 여겼다. 부럼깨기는 잣, 호두, 밤, 은행 등의 견과류를 깨물어 처음 깨는 것을 마당이나 지붕에 던지며 '부럼 나가라'고 외쳐 부스럼이 나지 않기를 바랐다.

정월대보름이 설과 추석처럼 큰 명절은 아니라 해도 오늘날만은 부럼을 깨고 오곡밥에 나물 몇 가지 정도는 먹어볼 일이다. 역운을 쫓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자 했던 조상들의 바람과 지혜를 기리며 떠오르는 보름달에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한다면 내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모두가 평안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

기고

달빛고속철도로 균형발전의 길을 넓히자



김종진 담양미래전략연구소장

영국의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차를 탄생시켰다. 최초의 증기기관차는 석탄을 옮기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멀리 떨어진 지역을 하나로 연결했다.

미국의 열차는 남북전쟁의 승패를 갈랐다. 전쟁 초기 링컨 대통령의 북군은 연전연패를 거듭하였다. 그 당시 군수물자는 노새와 마차가 담당했었다. 그러나 북군이 2배가 넘는 철길을 이용하면서 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기울었다. 서부 개척 시대에도 철길은 이민자들을 서부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다.

역사적으로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선 낙후된 국토를 연결하여 균형된 발전을 추구하며 국가로

서 통합하는 역할을 해 왔다. 최근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다. 대체로 양 지역 간의 철도 수요가 많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가장 큰 쟁점인 것 같다.

똑같은 상황은 50년 전의 88고속도로 건설 당시에도 있었다. 그때는 서울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동서 화합과 소통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 고속도로 건설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0여 년 동안 이 도로의 가치는 교통량과 사업성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지리산과 가야산 등 험준한 지형이 광주와 대구 사이에 교류를 막고 그 사이에 위치한 오지마을의 접근을 어렵게 해왔다. 그러나 이 도로는 두 도시를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었고 지금은 동서 화합과 교류의 상징이 되었다. 만약 사업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동서 간을 잇는 화합의 고속도로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고 했다. 동서 간의 거리를 좁힐 수 없다면 우리는 먼 사촌으로부터 지날

수 없다. 고속철도를 통해 마음의 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면 호남과 영남은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다.

88고속도로 개통 이후 나주 배, 완도 김, 목포 세발낙지, 흑산도 홍어 등이 대구나 포항까지 팔려나갔고 문경 사과를 비롯해 동해 오징어, 영덕대게가 소백산맥을 넘어 전라도로 빠르게 퍼져가는 등 지역 간 경제 교류가 왕성해진 것이다. 고속도로로 인해 있는 가야산 국립공원과 덕유산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등에 찾은 이가 늘어나기도 했다. 정치적으로 분열됐던 동서의 화합과 낙후 지역의 발전은 간과할 수 있는 성과다.

이번에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내륙의 동서를 횡단하는 교류가 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함께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낙관한다. 도시민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농촌가구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자연 친화적 상생을 추구할 수 있다. 두 지역간 농산물과 공산품의 거래를 촉진하고 낙후된 지역 특화 산업의 발굴과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社說

10주년 맞은 ACC...성과에도 과제는 산적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몇가지 점에서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도 아시아 문화 가치를 창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돋움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ACC는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개관했지만 초기에는 광주에서도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초창기 너무 실험적인 창·제작에 몰두하면서 관람객들과 괴리된다는 지적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아시아문화원과의 통합을 계기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 사랑방을 지향하면서 내실을 다져 복합문화예술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누적 방문객 19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지난해에는 개관 이래 처음으로 연간 방문객 320만명을 기록했다. 1900여건의 전시 콘텐츠 가운데 66%를 창·제작해 문화창작소로서의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했다. '사유정원, 상상너머를 거닐다'와 '이

건희 컬렉션: 피카소 도예전' 등은 흥행이 나 작품 면에서 성공한 전시로 이름을 알렸고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작품들도 선보여 민주·인권·평화라는 '광주정신' 실현에도 기여했다.

하지만 ACC를 대표할 만한 브랜드와 킬러 콘텐츠 부족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왕이면 지역 문화자산을 토대로 한 대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국립이라는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예술과 문화기관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충분한 지원을 하되 창·제작과 전시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당장을 어떤 인물로 선임할 지도 관심이다.

ACC가 5·18민주화운동의 성지인 옛 전남도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문제부가 5·18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복원에 어떤 콘텐츠를 넣을지도 지역민 입장에선 관심있게 지켜보는 대목이다.

예향 광주 자존심 '예술의거리' 활성화 시급

광주시가 예향 광주의 자존심인 '예술의거리' 활성화를 위해 16년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거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일회성인 탓에 사업 기간에만 방문객이 반짝 몰리고 다시 침체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광주시는 올해도 '아시아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예술의거리)'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 2009년부터 매년 추진돼 온 이 사업은 광주시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등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9억 원 중 예술의거리 4억원, 대인예술아시아 5억원이 투입되는데 최근 5년간 든 예산만 20여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연간 수억원씩을 투자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음에도 예술의거리를 찾는 방문객이 2만여명에 그칠 정도로 침체 일로에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공연 프

그램을 하지 않은 지난 한해 동안에는 전시 감상과 체험 등을 위한 방문객이 3270명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단발성 행사 위주 사업 진행과 대로(금남로)와 한 블록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 점이 거리 활성화의 위해 요소라고 분석했다. 먹거리나 기념품 등 상권도 형성돼 있지 않은 탓에 인근 ACC와 관광 동선을 연계하려 해도 방문객들이 동명동으로 빠져나가고 예술의거리로는 좀처럼 유입되지 않는다고 하소연 한다.

10여년간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거리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문제다. 결과가 어쨌든 그간 계속되는 사업으로 거리 상인들과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생긴 만큼 이제는 무작정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방문객 유입을 늘릴 방법을 찾고 상인, 작가들과 함께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등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대학마다 등록금 시즌이다. 초·중·고교 12년 노역한 고생의 결과로 얻은 대학 합격의 기쁨은 어느새 사라지고 학교에서 날아든 등록금 고지서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등록금'의 사전적 의미는 각종 단체에 가입, 등록하기 위한 금전을 말한다. 요즘에는 대부분 대학 등록금으로 통용된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결정에 학생들과 학부모의 부담은 더 커졌다. 올해 들어 전국 4년제 190개 대학 가운데 123곳(65%)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16년간 등록금이 동결돼 학교 재정난이 심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결국 학생들의 생활고로 이어지고 학업에 집중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의 경우 학비 충당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숨만 쉬어도 한 달에 60만원...1년 새 또 오른 대학가 원룸 월세', '등록금·월세 줄줄이 인상...청년 부담 증가', '국가장학금 중단, 대학생 날벼락', '등골 휘 것 같아...등록금 인상 소식에 대학생 곡소리'... 매일 수십 건씩 쏟아지는 관련 뉴스만

봐도 그들의 부담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국가에서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장학금 정책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지원되는 방식이다.

2025 국가장학금은 대학들의 등록금 줄임상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8구간 이하로 맞춰졌던 기준이 9구간 이하로 확대되면서 100만명에서 150만 명으로 수혜자가 늘었다. 구간은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1~10구간으로 나뉘고 구간별로

차등 지급된다.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은 국가장학금 I 유형에서 학기당 최대 285만원이 지급되고 높은 소득 계층에 해당되는 9구간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장 높은 10구간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2025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8일까지다. 대학생 또는 대학생이 둔 가정이라면 꼭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보람 예향부 차장 boram@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 note about the newspaper's commitment to journalism.